



주간통일정세 2010-05(2010.01.25~01.3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0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주1회꼴 軍양돈장 시찰..군대식량 걱정?(1/26, 연합뉴스)
 - 새해 들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이 작년보다 더 활발해져 주목됨.
 - 김 위원장은 26일 현재 모두 14회의 공개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1998년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가장 공개활동이 많았던 작년 동기(9회)보다도 56%나 늘어난 것임.
 - 분야별로는 산업 시찰 등 경제 부문이 7회로 ‘군 관련’(6회)을 앞섰고, 기타 분야로 중앙재판소를 한 차례 시찰했으나 외국인사 접견과 같은 ‘대외활동’은 한 건도 없었음.
 - 김 위원장은 올해 첫 공개활동으로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아가 작년부터 부쩍 높아지기 시작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함을 보여줌.
 - 김 위원장은 작년 3월, 9월에도 이 발전소를 시찰, 군인건설자들의 공사 속도를 ‘희천속도’로 명명하고 주민들에게 따라 배울 것을 독려
 - 이밖에 그가 현지도한 경제 분야는 황해남도 재령광산과 황해북도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장, 함경남도 흥남제련소와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안북도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등임.
 - 경제 분야보다 횡수는 적었지만 ‘군 분야’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였음.
 - 김 위원장은 군부대 가운데 처음으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 관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한 데 이어 북한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전투기와 함정, 방사포 등이 동원된 육해공 합동훈련을 참관함.
- 北김정일, 평안북도 신설 도로 시찰(1/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새로 만들어진 도로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하였으나, 일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은 도로들을 둘러본 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함.
 - 그는 이어 “국토관리사업은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당, 전군, 전민이 이 사업을 계속 즐기치게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임.

- 김 위원장의 이날 시찰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노동당 중앙위 부장 및 부부장이 동행함.

● 北김정일, 향산호텔 현지지도(1/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정확한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묘향산에 위치한 향산호텔을 찾아 식당, 침실, 연회장 등을 둘러본 뒤 “하나의 큰 호텔 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개건(리모델링)공사를 4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끝낸 것은 기적”이라며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을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 한광상 등이 동행

● 北김정일, 향산호텔서 軍공연 관람(1/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향산호텔에서 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앞서 30일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해, 김 위원장은 이 호텔에 머물면서 선전대를 불러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임.
- 이날 공연관람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주규창.리제강.리재일.한광상 당 제1부부장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평화협정, 한반도 대결 허무는 기점(1/30, 조선신보)

- 북한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고 있는 조선신보는 30일 “평화협정 협상은 조선반도(한반도) 대결구도를 허물고 북남공동선언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며 평화협정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 ‘자주통일의 국제환경 조성’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북한)은 미국과 진행해온 양자대화 경위와 유관국 요구까지 고려해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 “그러나 남측에서 체제대결 세력이 정책 기조를 전 시점에서 조선으로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보복성전’을 언급한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의 배경을 설명
- 신문은 “북측은 특히 통일부, 국정원 등 대북관련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막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던지려 하는 데 대해 엄



중 경고를 하고 있다”며 “체제대결은 북남관계의 극한점이자 전쟁이라는 것이 조선의 관점이고,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를 묻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은 남조선 당국의 명백한 대답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조선신보, 北경제부흥, 평화로운 환경 절실(1/25, 조선신보)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부흥은 평화로운 환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밝힘.
- 북한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60년째의 종전, 조선의 평화협정회담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나온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회담 제안은 “조선(북)의 수뇌부가 최근 조미관계의 전과정을 총화(결산)한 것이고, 오랜 교전국과의 최후담판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신문은 이어 “교전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총부리를 먼저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전쟁과 평화라는 조미의 근본 문제에서 안일한 양보나 판단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며 “불신에 갇히면 외교관은 말해 해도 군대는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지적
- 신문은 또 “유관국들의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전략적 결단 없이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비핵화 실현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거듭 강조
- 신문은 말미에 북한 지도부가 “60년째의 종전으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며 “조선의 호소는 진심”이라고 덧붙임.

● 北공식환율 무력..평양 호텔 환율 널뛰기(1/26, 연합뉴스)

- 북한이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이달 1일 공식 환율을 고시했지만 평양 시내 호텔 등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아직 정상 거래가 어려울 만큼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짐.
- 평양 사정에 정통한 서방 외교관은 26일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평양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따르면 이달 초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1유로당 138원으로 환율을 고시했는데 며칠 후 호텔 등에서 1유로당 4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며칠 만에 1유로당 51원으로 올랐다”면서 “북한 내 환율은 아직 매우 들쭉날쭉하고 불분명한 (fuzzy)한 상황”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심지어 외국인 방문객들이 묵는 평양 고려호텔에서는 지난 22일 1유로당 51원에 환전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다른 외국인에게 1유로당 120원에 바꿔준 일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최근 들어서는 환율뿐 아니라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기차역 주변의 국영상점에서조차 값을 매기지 못해 그냥 물



건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면서 “평양의 외국인 거주구역인 문수동의 단 하나 있는 슈퍼마켓도 외화사용이 금지된 1월초 폐쇄됐다가 18일야야 문을 열었다”고 말함.

- 그는 또 “지난주 외국인 방문객들이 만수대예술극장 내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유로화를 건넸더니 점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나서 그냥 유로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외화사용 금지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함.

● 北, 물가 폭등..주민들 망연자실(1/26, 좋은벗들)

- 작년 11월말 화폐개혁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 쌀값 등 북한 내 물가가 연일 폭등세를 보여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26일 전함.
- 이 단체는 소식지에서 “쌀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가장 상승 폭이 큰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이달 15일 kg당 240원에서 20일 280원, 21일 오후 350원, 22일 오후 650원으로 1주일 새 거의 3배로 올랐다”면서 “특히 24일에는 청진 수남시장에서 쌀값이 kg당 1천100원까지 치솟았다”고 밝힘.
- 소식지는 이어 “22일 현재 평양을 비롯해 황해북도 사리원, 황해남도 해주, 강원도 원산, 평안남도 평성, 평안북도 신의주 등 주요 도시 쌀값이 일제히 kg당 300원을 넘어섰다”며 “청진에서는 상인들이 쌀을 팔지 않은 채 가격만 올리고, 주민들은 감히 사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함.
- 소식지는 또 “이처럼 물가가 폭등하자 새 경제관리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도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모든 물가가 올라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장사를 못하게 해 끼니벌이 할 방법이 없어지자 주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함.
- 특히 각종 물품을 비싸게 되팔아온 ‘되거래 장사꾼’(중개업자)들의 경우 “쌀가격이 80~90원 할 때만 해도 이윤을 남기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1월 들어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폭등하자 더 이상 물건을 사들일 여유가 없어졌다”고 소식지는 말함.
- 소식지는 암시장 환율과 관련, “미화는 평양, 신의주 등에서 이미 달러당 420원까지 올랐는데 조만간 600원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고 전함.

● 北대풍그룹 박철수 ‘싱가포르 접촉’ 증개?(1/27,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설립한 국가개발은행의 대외 창구 기능을 하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를 맡은 재중동포 사업가 박철수씨가 작년 남북정상회담 물밑 접촉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해 관심이 쏠림.
- 27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박 총재는 작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알려짐.

- 한 대북소식통은 “박 총재가 작년 가을 조용히 한국에 들어와 임태희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접촉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임태희-김양건 회동’으로 본격화된 남북 간 정상회담 논의가 국군 포로, 남북자 송환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총재가 작년 12월 비밀리에 방한해 남측에 정상회담과 관련한 수정 제의를 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음.
-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발표하면서 투자유치는 박 총재가 이끄는 조선대풍국제그룹이 담당한다고 밝히고 그를 ‘박철수’로 밝혔음.

○ 北조선대풍그룹, 3월 인터넷에 사업공개(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설립 방침을 밝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오는 3월 인터넷에 사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이 그룹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이 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임.
-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관계자는 28일 “홈페이지 개설작업을 진행 중이며 3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대풍그룹의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유한공사 형태로 집행과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 국가정책상의 중요 투자업무를 담당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이사장으로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로는 재중동포인 박철수씨가 선출됐으며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노동당 유관부서, 조선아태평화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됨.
-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22일 (북한의)국가개발은행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투자건설 업무를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그룹이 중국 금융기구로부터 용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또 국가개발은행은 주주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주식 지분 21%를 국제투자자들이 보유토록 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대북교역 창구 중단등 무역 회복세 뚜렷(1/28, 연합뉴스)

- 중국의 최대 대북 교역 창구인 단둥(丹東)지역의 무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압록강일보는 28일 단둥해관 자료를 인용,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외 무역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던 단둥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함.
- 지난해 4분기 단둥해관의 무역 규모는 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액은 3억 9천6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7천400만 달러로 32.6% 늘었음.
- 무역 방식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들에 의한 변경 소규모 무역액이 1억 2천200만 달러로 43.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 무역은 2억 2천200만 달러로 6.7% 증가했으며 보세무역은 9천100만 달러로 14.6% 늘었음.
-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무연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단둥의 최대 수입 상품은 의류와 의류 부품이 차지했으며 최대 수출품은 전자기계 제품이었음.

라. 군사 관련

● 북, 백령도 근해에 항행금지구역 선포(1/2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5일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 2곳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
-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 의도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힘.
- 항행금지구역이 선포된 백령도 동방 1곳과 대청도 동방 1곳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걸쳐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함.
-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작년 12월21일 NLL 남쪽 해상에 선포한 ‘평시 해상사격구역’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남 위협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북한 해군사령부는 작년 12월21일 서해 NLL 이남 해역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바 있음.

● 北 NLL북측지역에 포사격..南 경고사격(1/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의 북한쪽 해상 2곳으로 해안포 30여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즉각 경고사격을 가했음.
-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5분부터 10시16분까지 해안포 30여 발을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탄착지점은 전날 북한이 선포한 2곳의 항행금지구역 내이며 NLL로부터 북한 해상 1.5마일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그는 “우리도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사거리 3~4km의 별컨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했다”면서 “북한이 포사격을 했을 당시 물기둥 20~30개가 솟아올랐다”고 전함.
- 북한은 옹진반도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동방 항행금지구역 내에 각각 20여 분, 30여 분에 걸쳐 포를 발사함. 북한이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는 “오전 9시5분께 북한이 발사한 포가 날아오면서 레이더에 포착됐다”면서 “NLL 이북 지역에 탄착지점이 형성되어 오전 9시35분부터 세 차례 경고통신을 했다”고 설명

● 北총참모부, 서해상 포사격 계속될 것(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는 27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포실탄 사격훈련을 확인하면서 “서해전연 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부대의 포실탄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이날 보도를 발표하고 “27일 오전 조선 서해 해상에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 측 수역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논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
- 보도는 또 “조선 서해 전연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함.
- 그러나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에서 실탄 사격훈련에 대응해 남한군이 사거리 3~4km의 별컨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은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으며 이곳은 모두 NLL에 걸쳐 있음.
- 북한군은 통상 3월 말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 서해NLL 쪽으로 또 포사격(1/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25분부터 수십 발의 해안포를 또 발사함.
-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한쪽 해상으로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힘.
- 군은 오후 3시35분께 해상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두 차례 경고통신을 함.
- 북한은 해안포를 1회 사격 때 5~10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짐.
- 합참 관계자는 “발사된 포탄이 NLL을 넘어오지 않아 경고사격은 하지 않았다”며 “포탄은 NLL로부터 2.7km 떨어진 북한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



- **北, NLL해상사격 '29일까지'로 일방 통보(1/28,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를 잇따라 발사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측이 오는 29일까지 해상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됨.
 - 군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 지역 NLL 인근 해상에서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간 해상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브텍스(NAV-TEX)를 통해 통보
 - 북한은 백령도 동부 NLL 인근 해상에는 25일부터 오는 3월29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했으며, 대청도 동부 해상에 대한 항해금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음.
 - 이와 함께 북한은 항해금지구역에 대한 좌표도 제시함.
 - 국립해양조사원은 “북한에서 나브텍스를 통해 해상사격구역과 항해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니 항해선박 및 조업어선들에게 주의하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힘.

- **북, 이틀째 포사격..연평도인근 북측 지역(1/28, 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이틀째 서해상과 서해 육상지역에서 10발 가량의 포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10분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북한 지역에서 5~6회, 오후 2시께 3~4회 각각 포성이 청취됐다”면서 “이날 최대 10회 가량 포성이 들렸다”고 밝힘.
 - 합참의 설명으로 미뤄 북한은 모두 10발 가량의 포사격을 한 것으로 추산됨.
 - 그는 “포사격으로 인한 물기둥이 관측되지 않았고 멀리서 포성이 들린 점으로 미뤄 북한 내륙에 인접한 해상이나 육상에서 포사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오후 2시30분 이후에는 아무런 특이동향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연평도 앞 북한 쪽에서 포성이 울렸다”면서 “안개로 육안 관측은 어렵지만 해안포 5~6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북한은 지난 25일 백령도와 대청도 동방 NLL 인근을 해상사격 구간으로 통보했으나 연평도는 제외됨.
 - 군 관계자는 “북한은 연평도 인근 북한 해상으로 포사격 훈련을 자주한다”면서 “이번에도 훈련 일환일 수 있지만 전날 집중적인 포사격 일환일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은 작년 초에도 연평도 북방에 있는 북한의 대수압도 해상으로 1천여 발의 포사격 훈련을 했음.



마. 사회·문화 관련

- WHO, 北개성서 신종플루 3명 처음 발생(1/26, RFA)
 - 북한 개성시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3명이 처음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전함.
 - WHO 측은 RFA와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개성과 신의주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알려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이제껏 신종플루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개성시 거주자였다”면서 “개성시 환자는 21살, 23살 여성과 15살 소년이고, 신의주 환자는 12살, 15살 소년”이라고 밝힘.
 - 이 방송은 이어 “북한은 아직 WHO가 제공한 30만여 개의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신종 플루 대응체계가 안정적이고 치료도 잘 이루어 이번에 추가 발생한 환자 5명 중 신의주의 12세 소년을 제외하고 이미 모두 회복됐다”고 설명
 - 방송은 또 “이번 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북한의 신종플루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집계됐지만 아직 사망자는 없다”고 덧붙임.

- 北토플점수, 세계평균보다 7점 낮아(1/28, RFA)
 - 2005년 이후 북한 국적자들의 토플(TOEFL) 점수가 다소 좋아졌으나 아직도 세계 평균보다는 7점(120점 만점 기준) 낮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함.
 - RFA는 TOEFL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ETS사 자료를 인용, “온라인 시험방식이 도입되고 만점이 120점으로 바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북한 국적 응시자들의 토플 점수는 평균 69점이었으나 2008년에는 72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힘.
 - RFA는 이어 “2008년 북한 응시자들의 점수는 읽기 17점(세계 평균 19.4점), 말하기 18점(/ 19.3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각각 1.3점 낮았고, 작문은 19점으로 1.5점 떨어졌다”면서 “합산 점수도 세계 평균(79점)보다 7점 낮았다”고 말함.
 - 이 방송은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응시자와 한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각각 69점, 72점으로 3점 차이였으나 2007년에는 69점과 77점으로 8점까지 벌어졌다”면서 “2008년에는 북한 72점, 한국 78점으로 6점 차이가 됐다”고 덧붙임.

- 北, 南지원 타미플루 출처 숨겨(1/30, RFA)
 - 북한이 우리 정부가 지원한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약의 출처를 숨기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북한 보건당국은 병원 의사들에게 신종플루 치료제가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들여온 거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 우리 정부는 지난 달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으며, 북한은 지난 19일 “타미플루 30만명분과 리렌자 8만명분을 평양과 각 시도에 골고루 분배했으며 나머지는 비축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배보고서를 우리 측에 보내옴.

● 北김책공대 대표단 뉴욕서 아바타 관람(1/31, 연합뉴스)

- 미국 시러큐스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홍서현 총장과 현학봉 외무성 부국장 등 북측 대표단 일행이 30일(현지시간) 저녁 뉴욕에서 영화 아바타를 감상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24일 뉴욕에 도착해 곧바로 시러큐스로 간 이들 일행은 그곳에서 첨단 정보 기술 등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가진 뒤 29일 뉴욕으로 돌아와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사학과 교수,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도널드 그레그 명예회장 등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미간 대화 움직임과 관련해 현 부국장 등 대표단이 미국 국무성 관계자 등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곳 외교관들은 “학술 교류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 부국장은 미국과 직접 대화할 만한 직책에 있지도 않다”고 말함.
-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대는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시러큐스대와 교류해 왔으며, 두 대학 학자들은 수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해옴.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美, 北, 운명 스스로 좌우..기회 있다(1/29, 연합뉴스)

- 미국은 28일 북한이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고 기회가 여전히 북한에 열려 있다면서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을 경고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날 국정연설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가질 기회를 그들은 갖고 있다”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립을 끝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로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 오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
-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이라고 밝힘.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한편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포사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 유해발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때는 다양한 행동들을 했다”면서 “공은 북측 코트에 있으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고 지적
- 그는 미군 유해발굴 사업이 미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첫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다른 것들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거듭 선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함.

● 스타인버그 “北 핵추구시 고통 계속될 것(1/30, 연합뉴스)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엄격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결과에 따른 고통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들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이어 오바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북한에 다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라는 분명히 열린 길이 있다”고 지적
-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비핵화에 진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하는 모든 다른 협상 요소들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이며, 추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시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함.
- 또한 미국은 29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핵 확산 문제에 미칠 결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지지 입장을 밝힘.



나. 북·미 관계

- 美, 北 NLL포격, 도발적 행동..도움 안 돼(1/28, 연합뉴스)
 - 미국은 27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쪽 해상으로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데 대해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함.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북한에 의한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실탄 포사격은 도발적 행동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결의를 보여주 기 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면서 구체적인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도 정레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은 남북한간의 양자적 문제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긴장을 고조 시킬 어떤 추가적인 행위도 하지 말도록 분명히 말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모두가 자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힘.
 - 그는 또 “한국은 이런 일에 최고로 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함.
 - 한편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 및 공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 초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함.
 - 그는 다만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추가)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 지만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달 방북에 이은 북미간 추가 접촉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음.
- 美 대북인권특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지원(1/2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 의 상봉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함.
 -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27일 이산가족 상 봉을 추진해온 한인 동포들이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상봉 법안 통과 를 주도했던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다음달 24일 워싱턴DC에서 킹 인권특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힘.
 - 이 총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지난해 12월 상 원 통과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후 국무부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면서 이같이 말함.
 - 커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상봉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 한 데 이어 12월 13일 상원에서도 의결됨.
 - 이 법안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리인 북한정책 특별대사에게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으로 다뤄주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위한 조정 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北의 ‘두 얼굴’..포사격 하며, 미군 유해발굴 제안(1/28, 연합뉴스)

 -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포사격을 한 북한이 같은 날 유엔사 측에는 2005년부터 중단됐던 미군 유해발굴을 재개하자고 제안함.
 -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28일 “북한군과 유엔사 간의 실무급 접촉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는데 북한 측이 미군유해 발굴 재개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한편 미국 국방부의 모린 슈먼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사와 북한 인민군이 26일(미국시간) 판문점에서 실무급 회담을 열고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실무회담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고 북한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회담에서 무엇이 결정됐는지 아는 바 없고 후속 실무회담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미국은 1996년 이후 북한 내 미군유해 200여 구를 찾아냈지만 2005년 안전상 이유로 발굴사업을 중단했음.

- 北통신, 불법입국 미국인 1명 억류(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불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힘.
 - 이 통신은 “25일 조(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이 억류됐다”며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함.
 - 그러나 중앙통신은 이 미국인의 신원과 입북 동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北, 미국인여행자 연중 입국 허용(1/29, RFA)

 - 북한이 미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기간 제한을 완전 해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북한은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처음 시작한 2002년부터 공연 기간인 8월부터 10월 초까지만 미국인 여행자의 방북을 허용해 왔음.
 - 북한 여행 전문인 미국 일리노이주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최대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미국인 관광객이 연중 아무 때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면서 “머지 않아 입국 경로 등에 대한 제한까지 풀리면 새로운 관광지와 여행상품의 개발로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 맞춰 미국인 관광객을 처음 초청해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면서 “4박5일로 묶여 있는 북한 내 체류기간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중국에서 기차로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여행하는 상품도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도 며칠 뒤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스티븐스, 한반도 돌발사태 대응준비 갖춰(1/29,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9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인 돌발사태에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기후회 조찬강연에서 대북관계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고 명확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고립과 제재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동의했다”며 “북한의 핵에 대한 야심이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 또 “미국은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도 탈북 주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스티븐스 대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의 기업·시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전 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北, ‘포사격’ 하면서 평화협정 거듭 요구(1/29, 노동신문)
 - 북한이 연이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수역에 포사격을 퍼부으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29일 ‘평화협정 체결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평화협정 협상의 시급한 개최는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의 시기성으로 보나, 현 국제정세 발전의 흐름으로 보나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또 “불신의 악순환을 깨고 신뢰를 조성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 체결 제안의 취지”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이런 취지를 옹기 인식하고 평화협정 협상탁(협상테이블)에 나와 앉기만 해도 신뢰 출발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어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돼 적대관계가 가셔지고 비핵화는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유관국들은 평화협정 제안을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을 외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서해 포사격 첫날인 27일 “미국이 조선(북)의 6자회담 복귀를 바란다면 어떻게든 불신 해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마주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된다”며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

● 北, 미국인 추가억류 공식 통보(1/30,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인 추가 억류 사실을 미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 국무부가 29일 밝힘.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뉴욕채널을 통해 이 같은 억류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함.
- “중국을 거쳐 북한에 지난 25일 들어간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다고 북한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북한에서 우리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추진중”이라고 말함.
- 하지만 그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이름이나 신원에 대해서는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함.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25일 조(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이 억류됐다”면서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보도
- 북한의 이번 확인으로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난.

다. 북·중 관계

● 北고려항공 평양-선양노선 잠정 운항중단(1/28, 연합뉴스)

- 중국 선양(瀋陽)과 평양을 오가는 북한의 고려항공 노선이 승객 감소로 운항이 잠정 중단됨. 고려항공 선양지점 관계자는 28일 “지난 27일부터 선양-평양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며 “다음 달 20일 이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고려항공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각각 왕복 1회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해왔음. 고려항공 측은 운항 중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승객 감소로 고전해왔으며 지난 13일과 16일에도 승객이 없어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해마다 1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일상적인 외국인 관광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승객이 감소, 종종 결항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예 한 달 가까이 운항을 중단한 것은 최근 수년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음.



- **中, 미국인 北역류 사건 모른다(1/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불법 입국한 미국인을 역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힘.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는 봤지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중국 측의 조사 착수 여부와 입북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中,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해야(1/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서해상에서의 북한의 잇따른 해안포 사격과 관련,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유리한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가 남북을 비롯한 유관 당사국의 근본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

라. 북·러 관계

- **연해주 홈페이지 남북한 광고 ‘나란히’(1/25, 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스키(연해주) 주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imorsky.ru>)에 남한과 북한의 배너광고가 동시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음.
 - 25일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남한과 북한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인터넷 배너광고가 연해주 주 정부 홈페이지 우측 배너 코너에 공동으로 게재되고 있음.
 - 남한의 배너는 우측 상단에서 7번째, 북한의 배너는 13번째에 배치됐으며 배너 광고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 나라’라는 이름의 북한 배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동소식과 더불어 정치, 관광, 무역 등을 소개하고 있고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등 8개 외국어로 번역된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음.
 - 이와 관련,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연해주 주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배너광고가 게재됐다”며 “그러나 한국총영사관이 한러 간 교류 및 교역규모 등을 감안해 남북한이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요청, 남북한 배너광고가 동시에 게재되게 됐다”고 했음.
 - 이 관계자는 “북한의 배너광고는 당초 한글로만 구성된 것이어서 연해주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1천 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다양한 외국어로 볼 수 있는 남한의 배너광고가 게재되자 북한도 외국어 서비스가 보장된 배너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마. 기타외교 관계

- 泰법원, 北 무기 수송 승무원 구금 연장(1/29, 연합뉴스)
 - 태국 법원은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다 억류된 화물기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내달 1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힘.
 - 지난달 체포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출신 승무원 5명은 불법무기 소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금 허가는 12일마다 연장되어야 하며, 이번 다섯 번째 연장임.
 - 피사완프라칸 검사는 이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지 결정하는 데에 적어도 1주일 더 필요하다며 내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할지,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지 등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泰 압류 북한 무기 최종 목적지는 이란(1/30, 연합뉴스)
 - 북한산 무기 40여t을 운송하다 지난달 12일 태국 당국에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태국 정부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 30일 보도
 - 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억류된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마흐라바드 공항이고 무기를 선적한 업체는 북한의 '조선기계산업'(Korea Mechanical Industry)인 것으로 드러남.
 - 이 보고서는 또 억류된 화물기에 로켓 49개와 로켓 발사대 1대, 폭약 도화선 세 상자, 로켓 추진식 폭탄 등이 실려 있었다고 밝힘.
 - 유엔 주재 태국 대표단의 폰프롬 펫클라이 대변인은 북한산 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달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유엔 고위급 인사 2명 내달 9일 방북(1/31, 연합뉴스)
 - 유엔 고위급 인사 2명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특사 자격으로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31일 밝힘.
 - 이번에 방북하는 유엔 인사는 린 파스코에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김원수 사무총장 특보 겸 비서실 차장
 -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 최고위급인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방북은 그동안 중단됐던 유엔과 북한 간 고위급 대화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방북단은 북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특사 방북 이후 유엔과 북한 간 고위급 채널이 완전히 복원되면 반 총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



- 유엔은 지난 코피 아난 사무총장 시절 모리스 스트롱을 대북 특사로 임명한 바 있지만, 스트롱 특사가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 연루 의혹으로 2005년 7월 물러난 뒤 유엔의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은 중단돼 왔음.

3. 대남정세

- 北, 개성회의서 법률제도문제 제기, 北매체(1/2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지난 19~21일 개성에서 열린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법률 제도상의 문제를 남한 대표단에 제기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5일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법률제도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평가회의)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관련해 법률 제도와 그의 완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기했다”고 전함.
 - 이 사이트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서 나타나는 엄중한 위법 실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공업지구에 행정 및 사법기구를 내오고, 법집행에 대한 감독통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법제 정비사업을 강화하고 공업지구법을 국제적 관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
 - 사이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공업지구사업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고 공업지구사업을 북남관계 개선과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의 법률문제나 세칙작성 사업에서 기업과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함.
- 北매체, 개성임금 ‘용돈론’ 연일 부각(1/30, 연합뉴스)
 - 북한이 이들 앞으로 다가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연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음.
 - 북한 언론매체들은 개성에서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가 끝난 지난 21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성공단에 관한 북한 당국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전함.
 - 북한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57.881달러 인 최저임금 문제, ‘근본적이며 선차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아가며 이를 당국간 논의에서 최우선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들은 한결같이 현재 임금을 “말이 임금이지 용돈도 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돈”이라고 ‘용돈론’을 부각시키며



남한 당국을 압박

- 매체별로는 대외용인 우리민족끼리가 개성공단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2일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 북측 단장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개성공단 북한 사법권 확대, 세율 인상, 개성공단관리위에 북측 참여 등 내용을 각각 별도의 시리즈물 기사로 잇따라 내보냄.
- 이밖에 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도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와 앞으로 이어질 실무회의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전함.
- 보도형식 면에서 보도 논평, 관계자 대담(인터뷰), 경제전문가 시론, 해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공단 소식을 다루고 있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유엔-北 고위급 대화서 北核 논의>(1/31)

-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북 일정이 내달 9일로 최종 확정되면서 유엔-북한 간 정치·외교적 고위급 채널 복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이번에 반기문 총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린 파스코에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유엔 사무국에서 반 총장의 바로 아래 직급자일 뿐 아니라 반 총장의 정치·외교 등 정무 관련 사항을 총괄 보좌하는 인물이며, 동행하는 김원수 특보 겸 비서실 차장은 반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방북이 갖는 의미는 남다름.
- 유엔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방북은 그동안 유엔이 북한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접근해 온 것을 포괄적 차원으로 바꾸면서 현재 북한에서의 유엔 활동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해 식량지원 등 인도적 문제뿐 아니라 북핵 등 정치·외교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음. 특히 북한이 최근 외무성 성명과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6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현실화된 것은 주목할 대목임. 북측이 이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보리의 제재 완화나 철회를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방북기간 북측 고위 관리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해 모든 유엔 관련 현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다만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유엔은 보완적 역할을 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음. 이들 고위급 특사 일행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갖는 것도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이번 고위급 특사의 방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분석임. 반 총장은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유엔 내 고위급 인사를 북에 파견해 먼저 상황을 파악해 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고, 올해 초에는 “한국인 사무총장으로서 금년에는 북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음.
- 그러나 유엔 고위 관계자는 반 총장의 방북과 관련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면서 “일단 고위급 특사의 방북 결과를 보고 난 뒤 6자



회담과 관련한 문제에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 6자회담 당사국의 의견을 듣는 등 준비 작업이 이뤄진 뒤에야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음. 한편 파스코에 사무차장과 김 특보는 방북 기간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등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유엔의 대북 사업 전반을 점검할 계획임.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유엔의 대북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美 “핵발전 강화가 핵확산 조장해선 안돼”(1/30)

- 미국은 29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핵 확산 문제에 미칠 결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임.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 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핵 재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한국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 차관과) 이해를 공유한 핵심은 우리가 민간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핵)확산의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음. 그는 “우리의 (한국과의) 협의는 이런 이해 위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민간 핵발전에 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핵)연료주기의 완성이 위험스러운 확산에 미칠 영향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민간의 핵발전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도 위험한 (핵)확산 활동을 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위에서 협력해 가기로 (한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원자력)협정을 갖고 있으며, 이 협정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한미 양국간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건식처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우선 착수하기로 한 점을 간접 확인했음. 한미 양국은 지난 25, 26일 천 차관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협의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앞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우선 착수하는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앨러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차관은 지난해 7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스타인버그 “北 핵추구시 고통 계속될 것”(1/30)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엄격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결



과에 따른 고통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했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들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 국무부 내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는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행동에 보상하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북한이 단순히 협상의 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 물질적 이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오바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북한에 다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라는 분명히 열린 길이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비핵화에 진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하는 모든 다른 협상 요소들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이며, 추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시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는 핵심적인 핵 문제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제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한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북측에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기회는 위협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음. 이 밖에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핵장치 개발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한일 양국에 대한 안보공약도 확인했음.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대한 북한군 포사격에 대해 “도발”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구했음.

● 美 “北, 운명 스스로 좌우..기회 있다”(1/29)

- 미국은 28일 북한이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고 기회가 여전히 북한에 열려 있다면서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했



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을 경고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날 국정연설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들(북한)은 기회를 갖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control)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고립을 끝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가질 기회를 그들은 갖고 있다”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립을 끝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특정하게 거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군축이나 비확산)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현재로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한편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포사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 유해발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때는 다양한 행동들을 했다”면서 “공은 북측 코트에 있으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유해발굴 사업이 미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첫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다른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거듭 선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6.25전쟁 당시 실종 미군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우려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6자회담을 우회해 미국과 양자대화를 갖기 위해 많은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제에 대한 양자대화도 6자회담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 그는 인도적인 문제도 이런 기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유해발굴을 포함한 인도적 논의도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이후에나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북측의 이틀째 계속된 NLL 포사격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어떤 도발적 행동에도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北 핵추구로 더 강한 제재·고립”(종합)(1/2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국제적인 합의를 위반한 채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은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이들 3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미 의사당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하고, 이란이 더욱 고립되는 것도 외교적 노력 때문”이라며 “이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무 이행을 계속 무시할 경우 틀림없이 좋지 못한 결과(consequences)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와 관련, “44개국이 향후 4년 동안 전세계의 모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바마 대북메시지와 6자 재개 전망>(1/28)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던진 대북 경고메시지가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어떤 파장을 드리울지 주목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첫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이라는 비핵화 테이블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고강도 압박정책을 지속해나겠다는 의지를 적극 천명한 셈임.
- 물론 이 같은 언급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론을 재확인한 측면이 강해보임.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1월1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석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임. 북한이 핵을 움켜쥘 때의 ‘후과’와 핵을 포기했을 때의 ‘보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양자택일을 압박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교가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강경 압박기조로의 선화라기보다는 대내외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선언적 의미’의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음. 무엇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은 자



신이 대선 때부터 내건 ‘핵무기 없는 세계 구축’ 공약 실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미 양국이 당장 6자회담의 재개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북핵 ‘포괄적 제안’ 열개 짜여졌나>(1/25)

-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북·미간 대치흐름 속에서 북핵 포괄적 접근안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 반대급부인 평화협정과 대북 경제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그림이 일본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임.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25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5자가 비핵화, 평화조약 체결, 대북 경제 지원 등 3대 사항을 동시 실현하는 내용의 포괄적 제안을 공동 제시하는 쪽으로 대체적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음. 물론 이는 그 자체로 새로운 내용은 아님.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에서 제안한 그랜드바겐, 또는 일괄타결안과 골격이 대동소이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작년 7월 꺼내든 ‘포괄적 패키지’도 궤를 같이하고 있음.
- 24일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위성락 평화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추동력을 얻으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상보(相補)적으로 추동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음. 관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조건 요구와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마련하느냐에 모아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음.

나. 미·북 관계

● 주일美대사 “北정권붕괴 가능성 우려 높아져”(1/30)

- 존 루스 주일 미국 대사가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그는 29일 도쿄 와세다(早稻田)대학 강연에서 주일미군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의 위협 등을 거론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을 “가장 가까운 우려”라고 지적했음. 루스 대사는 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권력승계와 관계돼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루스 대사는 또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普天間)비행장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에 대해 “주일미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



대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일본에서 해병대가 없어지면 지역에 있어서 미군의 기동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후텐마비행장의 오키나와현 이외 또는 외국으로의 이전, 그리고 대규모 해병대원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평가했음.

● 北, 미국인 추가억류 공식 통보(종합)(1/30)

- 북한이 미국인 추가 억류 사실을 미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 국무부가 29일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뉴욕채널을 통해 이 같은 억류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 지난 25일 들어간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다고 북한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북한에서 우리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의 안녕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이름이나 신원에 대해서는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통보는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음.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25일 조(북)·중국경지역을 통해 비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이 억류됐다”면서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음. 북한의 이번 확인으로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났음.

● “北, 미국인여행자 연중 입국 허용”<RFA>(1/29)

- 북한이 미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기간 제한을 완전 해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했다. 북한은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처음 시작한 2002년부터 공연 기간인 8월부터 10월 초까지만 미국인 여행자의 방북을 허용해왔음. 북한 여행 전문인 미국 일리노이주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즈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최대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미국인 관광객이 연중 아무 때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면서 “머지않아 입국 경로 등에 대한 제한까지 풀리면 새로운 관광지와 여행상품의 개발로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 맞춰 미국인 관광객을 처음 초청해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면서 “4박5일로 묶여 있는 북한 내 체류기간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중국에서 기차로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여행하는 상품도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도 며칠 뒤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통신 “불법입국 미국인 1명 억류”(1/28)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불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25일 조(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이 억류됐다”며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이 미국인의 신원과 입북 동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美서 北주민 일상 다룬 책 잇따라 출간>(1/28)

-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다룬 책이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출판되고 있음. 이 가운데 LA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냈고, 현재 베이징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바버라 데믹의 ‘세상에 부럼 없어라’(NOTHING TO ENVY)는 함경북도 청진 주민 6명이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어온 궤적을 이들과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엮은 책임. 뉴욕타임스(NYT)는 27일 “극동 지역의 야간 위성사진에서 주변의 한국·일본·중국의 화려한 불빛과는 달리, 블랙홀로 비쳐지는 북한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시작되는 이 책은 6명의 주민들의 개인사를 추적해 나가는 논픽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작가의 북한에 대한 깊은 지식이 배어 있는 책”이라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을 검열 없이 검색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음식, 젊은 여자, 핵무기 등을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최고지도자 김정일도 때때로 이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북한의 모습이 다른 나라들에 어떻게 비쳐질 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책의 내용 가운데는 청진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중국으로 탈북한 한 여의사가 중국 땅에 넘어와 한 민가 마당에서 쌀밥에 고기가 좀 들어 있는 개밥을 본 뒤 “중국의 개가 북한 의사보다 더 잘 먹는다”고 한탄했다는 구절도 있음.
- 오공단 박사와 랠프 해시그 박사의 공저인 ‘숨겨진 북한 사람들’(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도 200여명의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은둔의 왕국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조명한 것임. 이 책의 저자들은 김정일과의 협상은 거의 희망이 없는 것이며, 북한과의 핵확산 금지 조약 역시 미래의 새로운 위협을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 이라면서, 북한 정부를 우회해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오 박사와 해시그 박사는 책에서 “북한은 주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인질의 운명 보다는 인질범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음.
- 북한학자인 동서대 국제관계학과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가 최근 출간한 ‘가장 깨끗한 민족’(The Cleanest Race)에서는 북한을 움직이는 내면적 이데올로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음. 저자는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사상은 공산주의나 유교와도 관계없는 극단적 민족주의이며, 북한 사



람들은 혈통적으로 너무 순수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없이는 이 악의 세상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美 “北 NLL포격, 도발적 행동..도움안돼”(종합)(1/28)

- 미국은 27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쪽 해상으로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한데 대해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북한에 의한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실탄 포사격은 도발적 행동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결의를 보여주지 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면서 구체적인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남북한간의 양자적 문제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긴장을 고조시킬 어떤 추가적인 행위도 하지 말도록 분명히 말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모두가 자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모렐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의 행동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음. 그는 이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안전과 국제적 존중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면서 “우리가 어제 본 것과 같은 도발적 행동은 분명히 그런 길의 일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는 또 “한국은 이런 일에 최고로 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음.
- 한편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벼락 오바마 정부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 및 공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 초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음. 그는 다만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추가)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달 방북에 이은 북미간 추가 접촉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음. 이 밖에 그는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국적의 한국계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문제와 관련, “상황이 진전된 것이 없다”면서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여전히 영사접근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美 대북인권특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지원(1/28)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음.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27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온 한인 동포들이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상봉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크 커크(공화당,일리노이주)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다음달 24일 워싱턴DC에서 킹 인권특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 총장은 이날 전화통



회에서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지난해 12월 상원 통과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후 국무부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커크 의원 측으로부터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이번 달에 뒤늦게 전해들었다”면서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킹 특사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커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상봉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2월 13일 상원에서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리인 북한정책 특별대사에게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으로 다루주고 필요하면 이 문제를 위한 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커크 의원은 의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에는 10만~50만 명의 이산가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후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가 없어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가족들과 접촉하기 위해 암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총장은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해야”(1/28)

- 중국 외교부는 서해상에서의 북한의 잇따른 해안포 사격과 관련,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유리한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가 남북을 비롯한 유관 당사국의 근본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중국은 서해안에서 연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 됨. 이틀째 서해 유관 당사국이 공동해상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으며 한국 군은 경고사격을 가해 남북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음.

● 北고려항공 평양-선양노선 잠정 운항중단(1/28)

- 중국 선양(瀋陽)과 평양을 오가는 북한의 고려항공 노선이 승객 감소로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 고려항공 선양지점 관계자는 28일 “지난 27일부터 선양-평양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며 “다음 달 20일 이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항공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각각 왕복 1회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해왔음. 고려항공 측은 운항 중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승객 감소로 고전해왔으며 지난 13일과 16일에도 승객이 없어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지난 27일 선양으로 돌아온 한 중국인



은 “원래 고려항공을 이용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운항이 중단되는 바람에 열차를 타고 단둥을 통해 선양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곧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한국의 한 대북지원단체도 선양-평양 노선 운항 중단 조치에 따라 선양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려던 애초 계획을 변경, 베이징을 경유하는 노선을 택했음.

-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해마다 1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일상적인 외국인 관광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승객이 감소, 종종 결항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예 한 달 가까이 운항을 중단한 것은 최근 수년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 대북교역 창구 中단둥 무역 회복세 뚜렷(1/28)

- 중국의 최대 대북 교역 창구인 단둥(丹東)지역의 무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압록강일보는 28일 단둥해관 자료를 인용,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외 무역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던 단둥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음. 지난해 4분기 단둥해관의 무역 규모는 4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음. 이 가운데 수출액은 3억9천6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7천400만 달러로 32.6% 늘었음. 중국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 교역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단둥해관의 무역 가운데 대북 교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북 무역의 70%를 차지할 만큼 북한과 교역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4분기 무역이 증가한 것은 북한과의 거래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무역 방식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들에 의한 변경 소규모 무역액이 1억2천200만 달러로 43.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음. 일반 무역은 2억2천200만 달러로 6.7% 증가했으며 보세무역은 9천100만 달러로 14.6% 늘었음.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무연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단둥의 최대 수입 상품은 의류와 의류 부품이 차지했으며 최대 수출품은 전자기계 제품이었음.

라. 기타

● “泰 압류 북한 무기 최종 목적지는 이란”(1/30)

- 북한산 무기 40여t을 운송하다 지난달 12일 태국 당국에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태국 정부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 30일 보도했음. 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억류된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마흐라바드 공항이고 무기를 선적한 업체는 북한의 ‘조선기계산업’(Korea Mechanical Industry)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 보고서는 또 억류된 화물기에 로



켓 49개와 로켓 발사대 1대, 폭약 도화선 세 상자, 로켓 추진식 폭탄 등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다.

- 유엔 주재 태국 대표단의 폰프롬 펫클라이 대변인은 북한산 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달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련 외교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현재 태국 정부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그루지야 등 관련 국가들에 발송할 서한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태국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2월11일께 압류된 북한산 무기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태권도인들, 방북 추진”<VOA>(1/29)

-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 미국 태권도인들이 오는 4~5월 방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했다. 미국 ‘태권도타임즈’의 정우진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4월 이후 방북하는 일정으로 애틀랜타에서 20~30명 참여하고 다른 일부 도시에서 1~2명씩 추가하려고 한다”며 “방문단의 95% 이상을 순수 미국인으로 구성해 북한 선수들과 함께 시범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2006년 이후 4년 만에 북한 방문이 이뤄지는 것인데, 2007년에는 정 회장의 초청으로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미국을 방문,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등 5개 도시에서 시범 행사를 갖을.
- 정 회장은 “애틀랜타 거주 태권도인들의 주도로 이번 계획의 스폰서를 찾고 있는데 애틀랜타 지역에 본부를 둔 코카콜라, 홈디포, CNN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광고예산이 많은 코카콜라의 경우 전 세계에 다 들어가면서 북한에만 진출하지 못해서인지 스폰서에 적극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애틀랜타의 ITF 관계자들은 코카콜라를 포함한 세 업체의 요구에 따라 북한 정부에 공식 초청장을 요청했는데 북한 측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泰법원, 北무기 수송 승무원 구금 연장(1/29)

- 태국 법원은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다 억류된 화물기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내달 1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달 체포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출신 승무원 5명은 불법무기 소유 혐의 등을 받고 있음. 이들에 대한 구금 허가는 12일마다 연장되어야 하며, 이번 연장은 다섯 번 째로 취해진 것임. 피사완프라칸 검사는 이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지 결정하는 데에 적어도 1주일 더 필요하다며 내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할지,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지 등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北토플점수, 세계평균보다 7점 낮아” <RFA>(1/28)

- 2005년 이후 북한 국적자들의 토플(TOEFL) 점수가 다소 좋아졌으나 아직도 세계 평균보다는 7점(120점 만점 기준) 낮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RFA는 TOEFL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ETS사 자료를 인용, “온라인 시험방식이 도입되고 만점이 120점으로 바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북한 국적 응시자들의 토플 점수는 평균 69점이었으나 2008년에는 72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RFA는 이어 “2008년 북한 응시자들의 점수는 읽기 17점(세계 평균 19.4점), 말하기 18점(세계 평균 19.3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각각 1.3점 낮았고, 작문은 19점으로 1.5점 떨어졌다”면서 “합산 점수도 세계 평균(79점)보다 7점 낮았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응시자와 한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각각 69점, 72점으로 3점 차이였으나 2007년에는 69점과 77점으로 8점까지 벌어졌다”면서 “2008년에는 북한 72점, 한국 78점으로 6점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미국 ETS사가 공인한 시험대행 기관이 없어, 북한 국적 응시자는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및 자녀일 것으로 추정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캠벨 미국무차관보, 내달 2일 방한(1/31)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다음 달 2일 방한할 예정임. 캠벨 차관보는 4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만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임. 그는 또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및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함. 캠벨 차관보는 이 밖에 유명한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을 예방함. 정부 관계자는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동북아 순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양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방한에 앞서 같은 달 1~2일 일본을 방문, 외무성, 방위성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비롯한 미·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 美 “이 대통령 강력지지”..남북정상회담 지지시사(1/30)

- 미국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지지 입



장을 밝혔음.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우드로윌슨 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이 대통령의 BBC방송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의 접촉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진행할 것이며, 모두가 동의하는 틀에서 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우리는 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정리한 매우 분명한 길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우리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6자회담으로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앞서 이 대통령은 영국 BBC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면서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한반도 돌발사태 대응준비 갖춰”(종합)(1/29)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9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인 돌발 사태에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음.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기후회 조찬강연에서 대북관계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고 명확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고립과 제재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동의했다”며 “북한의 핵에 대한 야심이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도 탈북 주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의 기업·시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준다는 사실 알고 있다”며 “이전 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아프간·이라크 등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이티에도 한국이 상당한 지원을 했고 유엔과 함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같은 변화는 한국이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한국의 평화유지군은 세계 곳곳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스티븐스 대사는 또 한미FTA와 관련, “교역량이 1천억 달러를 넘는 한미간의 무역관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과 수입이 상당히 균형



을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3~1989년 한국 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등에 근무하기도 한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강의 중 우리말을 종종 섞어 써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음. 이날 경기 기우회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그는 조찬강연을 마친 뒤 김문수 경기지사와 함께 경기나노특화센터의 한미 협력 기관과 수원 화성행궁 등을 둘러봤음.

● 한미, 주한미군기지이전 조속해결 공감(1/29)

- 방한 중인 마이클 쉬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현안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쉬퍼 부차관보는 28일 열린 제24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임.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한국은 2015년 상반기까지 미 2사단 이전을 완료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측은 2016년까지 이전하자고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쉬퍼 부차관보를 만나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지역개발 문제 등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전 시기가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며 “우리측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완료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측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공히 기지이전 문제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합의도 빨리 이루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음.
- 쉬퍼 부차관보는 SPI회의는 물론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하지만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작권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가 없었다는 게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의 전언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쉬퍼 부차관보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쉬퍼 부차관보는 27일 김태영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연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무슨 의미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쉬퍼 부차관보가 김 장관의 최근 언급에 대한 의미를 물었고 김 장관은 ‘우리 군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 연기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그런 고심까지 곁들여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고, 그 외 다른 언급은 서로가 없었다”고 말했다.

● 한미, 北도발에 공조강화 확인(1/28)

-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28일 제24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전날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사격 도



발 등 북한의 최근 군사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우리측은 북한군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NLL 해상에 집중적인 포사격을 하는 등의 도발행위와 최근의 동계훈련 현황 등 북한 군사동향을 미측에 상세히 설명했음. 양측은 한미 연합 자산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정책적으로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미측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 양측은 또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군사지침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국방지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과 핵확장억제 구현 의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임. 양측은 아울러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및 보호병력 파견 문제와 주한미군 이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음. 이날 회의는 우리측에서는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음.

나. 한·일 관계

● 오키다 日외상 내달 10~11일 첫 방한(1/29)

- 오키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내달 10~11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일본 신문들이 28일 보도했음.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오키다 외상이 2월11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6자회담 복귀 등을 논의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음. 오키다 외상이 한국을 찾는 것은 작년 9월 취임 후 처음임. 니케이신문도 이날 오키다 외상이 2월 10~11일 방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유명환 장관과 중단된 경제연대협정(EPA) 교섭, 올해 상반기로 상정된 이 대통령의 방일 문제, 북한 정세에 관해서 협의할 것으로 전망했음.

다. 미·중 관계

● <中, 美에 ‘말아닌 행동’으로 불만 표시>(1/31)

- 중국이 대미외교를 강경 대응으로 선화, 올해 중-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음. 중국은 30일 대만에 64억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를 판매키로 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군사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키로 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음. 주무 부서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미국에 대한 4대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대만사무



판공실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도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고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음. 중국이 이례적으로 국력을 총동원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선 셈인데 중국 측의 불만과 대응 강도를 짐작케 하고 있음.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제동을 걸고자 지난 11일 예고 없이 미사일 요격실험을 하고 곧바로 실험 성공 사실을 발표, 무력시위에 가까운 경고를 하면서 미국의 행동에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했음. 이는 중국의 대미 외교·군사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종전 미국의 조치에 불만일 때 말에 그치던 불만 표시를 이제 행동으로 맞받아 치겠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임. 미국 전투기가 지난 1999년 5월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 중국인 3명이 사망했을 때 중국내에 민족의식이 고양되고 반미감정이 한동안 들끓었지만 중국이 끝내 행동으로는 미국에 맞서지 못했던 상황을 상기하면 중국의 변화는 극명히 드러남. 10여년 만에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지위는 미국에 행동으로 맞설만큼 급성장하고 높아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종전에는 미국으로부터 따귀를 맞고도 말로만 투덜거리며 욕만 했으나 이제 바로 따귀로 맞설 정도로 국력이 신장했다고 말했음. 작년 벉락 오마바 대통령의 방중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중시’발언 등 밀월기였던 중-미 관계는 올들어 구글사태에 이어 미국의 대만무기 판매를 계기로 잠복해 있던 양국 현안들이 하나 둘씩 차례차례 수면 위로 떠올라 크고 작은 파동이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 부원장은 내다봤음.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과 티베트문제, 미국의 중국 화폐 런민비(人民幣) 평가절상 요구, 중-미 무역 역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조짐이 보일 때 강경 대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그때마다 양국 관계에 파동이 칠 것이고 이밖에 예상외의 북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중-미 양국 관계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판을 깨지는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선에서 파동이 칠 것이라고 진 부원장은 올해 중-미 관계를 전망했음. 양국은 강대국으로서 ▲정면 충돌을 하면 서로 손해를 본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기후변화, 국제금융위기 극복, 아태지역 및 국제 문제 해결에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생기더라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결을 시도한다는 이유임. 미국이 수렁에 빠진 이라크와 아프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점도 양국간 충돌의 확대를 막는 이유로 작용함. 이밖에 중-미 간에는 정상회담과 전략, 경제대화이외에 63개 이상의 차관급 협상 채널이 열려있어 갈등의 봉합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조만간 평온으로 되돌아 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미·중 불협화음..6자회담 ‘악영향’ 주나>(1/31)

-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 결정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 여파가 북핵 6자회담에까지 미칠지 관심임. 제재를 풀지 않고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북한과 6자회담과 제재는 별개라는 미국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회담 재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불편한 관계에 빠질 경우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음. 미·중 양국은 지난해부터 인민폐 절상 요구와 거부, 중국산 강관 상계관세 부과와 반발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왔음. 게다가 올들어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 선언으로 촉발됐던 사이버 충돌에 이어 이번에 대만 무기판매 문제로 갈등의 수위가 높아져 갔음.
-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은 미묘함. 정부 관계자는 31일 “중국의 반발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기존의 판을 깨는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한 다른 이슈에서 중국이 당분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실제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무기판매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미 양국간 협력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일간 의견 대립과 북한이 미국인 2명을 억류 중인 점 또한 직·간접적으로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북핵 국면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일각에서는 미·중, 미·일간 갈등이 북한을 제외한 다른 5개 참가국간 공통의 대응기조를 마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 이슈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조기에 봉합되고, 6자회담에 미칠 영향도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음. 고위 외교당국자는 “미·중간 대립이 6자회담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서로 간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6자회담에 주는 영향도 기본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음. 이런 상황 하에서 결국 6자회담을 재개에는 북한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라는 데에는 외교가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결국 북한이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힘.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재개 문제에 손을 놓지는 않을 테지만 아무런 성과 없는 회담을 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회담 재개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통해 복귀시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 中, 對美 군사교류 전격 중단(종합2보)(1/30)

- 중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키로 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군사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키로 했음. 중국 국방부 황쉐핑(黃雪平)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양국 군부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양국 간 군사교류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음. 중국 외교부도 30일 허야페이(何亞非)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양국간 군사교류를 중단하고 안보·무기감축·비핵화 문제를 두고 진행되는 양국간 차관급 대화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 부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회사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번 무기판매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부장은 이날 존 헨츠먼 주중 미국 대사를 소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대만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양국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음.
- 중국의 이 같은 초강경 대응으로 불 때 북핵 6자회담 재개 노력,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에 대한 제재, 기후변화 대응 등 중요한 국제문제에서 주요 2개국인 양국간의 공조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음. 중국은 지난 2008년 10월에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약 4개월간 군사교류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미국 회사에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분야의 양국간 협력의 훼손 가능성 등을 거론하지는 않았음.
- 중국의 대만사무관공실도 미국의 이번 조치가 대만의 독립노력을 부채질하고 양안(兩岸)간 협력·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도 이례적으로 별도의 성명을 내고 “양국간 합의한 3개 공동성명을 무시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대해 중국인들은 강렬한 분노를 표시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 무기 판매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미국 정부가 29일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6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의의사를 표명한 뒤 결국 군사교류의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황쉐핑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8일 성명에서 “무기 판매는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엄중히 훼손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음. 앞서 중국은 미국이 무기 판매를 추진하던 지난 11일 예고 없이 미사일 요격실험을 하고 곧바로 실험 성공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에 가까운 경고를 한 바 있음.
- 미국과 중국의 군사교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활발하게 진행돼 왔음. 쉬차이허우(徐才厚)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해 10월 말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



고 군사·국방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다짐했으며 양국은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소탕 작전을 펼치고 아이티 지진 희생자의 구조과정에서도 공조 활동을 해 왔음.

● 中, 美 대만에 무기판매 엄중 경고(1/30)

- 미국이 대만에 6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에 대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29일 밝혔음.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계획은 양국 관계에 분명한 손상을 가져오고 아울러 양국관계의 주요 부분의 교류와 협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대(對) 대만 무기판매는 미-중 간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클린턴 "中, 이란제재 동참 않으면 외교고립"(1/3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고립에 봉착하고 에너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29일 경고했음. 파리를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같이 말하고 "워싱턴과 주요 강대국들이 (이란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제재와 압박정책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중국도 이란이 핵 무장 할 경우 석유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걸프지역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세 번째 석유 공급국인 이란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이란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에서도 걸프지역 평화에 대한 "장기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음.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클린턴 장관과 회담을 갖고 "오랜 헛수고로부터 필요한 결론을 이끌어 낼 때가 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에 대해 보다 강경한 결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프랑스는 내달 유엔 안보리를 주재하게 되며 중국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네 번째 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임.
-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 3차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강화하기 위해 4번째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이번 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새 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서 새 제재안에는 특히 이란의 군사조직을 겨냥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클린턴 장관은 베르나루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 한 뒤에도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경한 결의안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또 프랑스 사관학교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유럽의 안보협력을 재활성화 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미사일 방어 문제 등에서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테러리즘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역사상의 거대한 도전들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새 시대의 (대서양 양안의) 협력관계를 더욱 새롭게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中, 오바마 ‘중국위협론’ 비판(1/28)

-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애국주의를 견지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진 중국과 인도에 대한 우위를 잃을 위험이 크다”며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 마 대변인은 “우리는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큰 미국의 외교정책이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추진에 유리하기를 희망하며 중국은 미국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발전을 도모하길 원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책임이 큰 국가로서 양호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과 의미에 대해 중국 당국은 더 자세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中, 구글에 유화적 제스처(1/28)

- 중국 정부가 구글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구글이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휴대전화 사업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임. 주홍런(朱宏任)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데 대해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글이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통신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음. 주 대변인은 “구글의 휴대전화 사업이 발전하는데 아무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중국 공업정보화부 정책법규사 귀푸화(郭福華) 부사장도 15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인해 3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중국과 미국간 사이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던 구글사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나온 것임. 미국과 중국은 며칠 전만 해도 인터넷 자유와 내정 간섭 등을 서로 내세우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쳤으나 이후 원색적인 비난은 잦아들고 있는 상황임. 구글의 향후 사업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입장표명은 인터넷 검열을 둘러싼 구글과 중국의 전면전이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모바일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음.
- 구글은 지난 12일 중국 당국의 인터넷 정보 규제와 해킹에 반발해 구글 중국어판의 검색 결과를 더는 검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앞으로 구글이 중국 시장에서 당국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구글은 실제로 19일 삼성, 모토로라와 공동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휴대전화 2종을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과 함께 20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해 각종 추측이 제기된 바 있음.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8일 런던에서 만나 구글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부시 “中 발전은 美에 기회”(1/27)

-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26일 중국 산둥(山東)성 지닝(濟寧)을 방문, “나는 중국의 굴기(屈起: 우뚝 일어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중국 화친(華勤)그룹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이 회사에서 행한 강연에서 “중국은 지난 30여년 간 거대한 변화를 이뤄 완전히 변모했다”면서 “중국의 비약적 성장은 개방정책과 무역, 그리고 시장의 중요성을 구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제남시보(濟南時報)가 27일 보도했음. 부시 전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그는 또 자신이 낙관주의자라면서 “국제경제는 반드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의 구글 사태를 비롯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달라이 라마 문제, 무역마찰 등 미·중간 현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화친그룹이 부시 전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사례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5년 9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저우(鄭州)에 있는 특배송업체 중루우류바이송(中陸物流配送)이 지급한 25만 달러와 4회의 강연 등을 통해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 美-中, 구글발 ‘사이버 전쟁’ 전면전 양상(1/25)

-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구글발 사이버 전쟁에서 한 치 양보 없는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갈수록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5일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 해킹 사건에 중국 정부가 간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인터넷 검열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성명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없애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온 것임. 데이비드 매키날로 USTR 대변인은 미국 언론자유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터 쉬어 언론자유협회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검열하기 위한 중국의 ‘만리 대방화벽’은 외국 기업들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업정보화부 대변인 명의로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격에 맞서 대대적인 반격에 또 다시 나선 셈임. 이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참여했다는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이며 중국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우리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사이버 전쟁을 벌인 발단은 지난 13일 구글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해킹에 반발, 중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촉발됐음.

라. 기타

● “中, 파키스탄에 군기지 건설시사”(1/29)

- 중국이 파키스탄 등 이웃 국가에 인민해방군 해외기지 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문을 인용해 29일 보도했음. 이 기고문의 집필자인 안보전문가 선딩리(沈丁立) 푸단대학 교수는 “지금까지 중국이 해외 파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미래에도 (해외) 군 기지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이것(해외에 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면서 이웃국가 특히 파키스탄에 인민해방군 기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저자는 이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해당 국가나 잠재적인 적국 인근에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우리는 해외에서의 이권을 위해 잠재적인 적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해외 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음. 이는 선 교수의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신문의 지적임. 중국은 ‘전천후 우방’인 파키스탄에 군기지를 건립함으로써 신장위구르 자치구내 분리주의 무장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 아시아의 경쟁자인 인도는 물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이와 관련,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싱크탱크인 국방연구분석기구의 라메시 V. 파드케 고문은 “나는 언젠가 중국이 인도 인근 국가에 군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중국은 파키스탄 그와다르에 항구를 건설했고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은 필요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中, EU에 무기금수 해제촉구(1/28)

- 중국은 20년간 계속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대(對)중국 무기 수출금지 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EU가 조속히 정치적 결단을 내려 한시라도 빨리 조건 없이 금수조치를 해제해 중-EU 간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마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EU 회원국인 스페인을 중심으로 EU의 금수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나온 것임. 그는 “EU의 대중 무기 금수 조치의 실체는 중국을 정치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며 중국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의 시대적 조류와 중국과 EU간의 전면적인 전략동반자 관계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 미겔 앙헬 모라티노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26일 브뤼셀에서 EU 가입을 추진 중인 세르비아와 각료급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 중국 무기 금수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찬반양론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EU는 중국이 지난 1989년 민주화 요구 시위대를 유혈, 무력진압한 ‘텐안먼(天安門) 사태’ 직후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회원국의 대 중국 무기 수출을 금지했음. 이후 외교관계는 단계적으로 복원, 1992년 정상화했으나 무기 금수조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EU 회원국 가운데 무기산업이 발달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대 중국 무기 금수조치 해제를 원하고 있음.

● “中 달라이 라마 특사 곧 베이징 방문”(1/27)

- 달라이 라마의 특사 2명이 26일 중국 후난(湖南)성에 도착한 데 이어 금명간 베이징으로 이동, 중국과 15개월 만에 대화에 나섬.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관계자가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대화는 과거에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이 관계자는 유관 당국이 내달 초 대화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달라이 라마의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망명정부의 특사인 로디 갈리(甲日洛迪)와 켈상 갈첸(格桑堅贊) 등 2명이 26일 중국과의 대화를 위해 방중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또 중국 외교부도 달라이



라마 특사의 방중 사실과 함께 회담 계획을 확인했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각국도 2008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재개된 양측 대화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회담에서는 달라이 라마 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大)티베트 자치’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달라이 라마는 현재의 티베트자치구뿐만 아니라 티베트인이 많이 거주하는 칭하이(青海)성과 간쑤(甘肅)성 등의 일부를 포함해 중국 영토의 4분에 1에 달하는 지역에 ‘대티베트 자치구’를 만들어 고도 자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준(準)독립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주장에는 중국 군대와 다른 민족을 내쫓으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 및 영토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 같은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회의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짐.
- 티베트 망명정부의 삼동 린포체 총리는 “망명정부의 입장에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화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을 상당부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 특사 2명은 며칠간 계속되는 대화에 참여한 뒤 내달 초 인도로 돌아갈 예정임.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 측은 2008년 3월 라싸(拉薩) 폭동사태와 강경진압 후 3차례를 포함, 모두 8차례의 대화를 가진 바 있음. 라싸 사태 이후 티베트 망명정부는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중국 정부는 최근 15개월간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한 달라이 라마의 우선 복귀를 주장하면서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해왔음. 외신들은 이번에 대화가 재개된 것을 두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재개를 촉구해 온 미국 등 서방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마잉주 “美무기 계속 구매”(1/27)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미국 무기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대만 신문들이 27일 보도했음. 마 총통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만계 미 하원의원 우전웨이(吳振偉)를 만나 대만 정부가 방위력 증강을 위해 미 무기를 계속 구매하고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의 발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말라고 중국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대만과 수교국인 온두라스와 도미니카를 방문하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 들른 마 총통은 대만 화교가 경영하는 생명공학 기업인 ‘익방제약공사’(益邦製藥公司)도 방문했음. 마 총통은 2008년 5월 취임 후 지금까지 3차례 미 본토를 경유했으나 호텔 밖 활동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임. 마 총통은 27일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정상



회담을 가진 뒤 28일 도미니카 수도 산토도밍고를 방문해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아이티 지진 구호에 대해 협의하고 의약품, 식량 등 지진 구호물자 10t을 육로로 아이티에 전달할 예정임. 그는 5박6일 일정으로 중미를 오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각각 경유하며 미측과 쇠고기 문제 등 양국 현안을 협의할 예정임.

● 나토-러시아, 군사협력 재개(1/26)

- 지난 2008년 여름 그루지야전쟁 이후 중단됐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26일 공식으로 재개됐음. 양측은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나토-러시아협의회(NRC) 체제 아래 최고위급 군사 대화인 참모총장급 회담을 개최, 대(對) 테러리즘과 해상 구조, 해적 퇴치 등의 현안을 논의했음. 나토와 러시아가 NRC 틀 속에서 참모총장급 회담을 개최하기는 그루지야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마카로프 참모총장이, 나토 측에서도 28개 회원국의 참모총장이 참석했음.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나토의 국제 아프가니스탄치안지원군(ISAF) 임무 수행과 관련해 러시아의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잠파울로 디 파올라 나토 군사위원회 대변인이 밝혔음. 나토는 이미 살상무기 이외의 군수품을 러시아 영토를 거쳐 아프간에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러시아와 맺은 바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 영토를 거쳐 아프간에 보급되는 물품의 확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음. 그루지야전쟁 이후 중단됐던 양자 참모총장급 회담은 애초 작년 5월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나토가 5월6일부터 6월1일까지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 교외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러시아가 이에 반발함으로써 연기됐었음. 당시 나토는 이 군사훈련이 그루지야전쟁 이전에 기획됐고 사전에 러시아에 통보됐던 것이라며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었음.

● 中-대만, '양안 FTA' 첫 협상 돌입(1/26)

- 중국과 대만이 26일 양안(兩岸)간 자유무역협정(FTA)적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위한 첫 공식 협상에 돌입했음.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대표단이 이날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호텔에서 첫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음. 해협회는 정리중(鄭立中) 상무부회장이 이끌며 대만 측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에서는 가오쿵렌(高孔廉) 부이사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음. 해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분임 토의 형식으로 이미 진행된 양안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협정의 정식 명칭과 기본 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가오쿵렌 부이사장은 대만의 여론을 의식한 듯 “향후 협상에서는 대륙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과 농산물 관세 폐지 정책인 조기수확(Early harvest) 등 농산



품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간 사실상의 FTA인 ECFA는 서로 거래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관세를 대거 낮춰 무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안간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이뤄지면서 대만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대만의 기계, 섬유, 석유화학 품목 관세면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럴 경우 전자와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이 한국과 겹치는 대만에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문호가 완전히 열리게 돼 우리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협상 시작 전날인 25일에는 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양안간 경제협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12월말 대만 타이중(臺中)에서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간 제4차 회담을 열어 양안간 ECFA와 지적재산권보호를 올 상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5차 양안회담 의제로 확정했음. 중국과 대만은 26일 하루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 협상의 밑그림을 그린 뒤 조만간 추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 협정은 제5차 양안회담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됨.

● 中-대만, 아이티 지진으로 ‘외교전’ 재개(1/25)

- 중국과 대만이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희생자 구조와 구호에 나서며 ‘외교전’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25일 오후 아이티와 인접한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순방을 위해 출국, 양안외교전 재개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관측임. 마 총통의 이번 순방은 미국의 대만 항공기 자국 영토 착륙 허용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아이티 지진 구호를 위한 양안간 경쟁의 함의를 담고 있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함. 마 총통은 이번 순방중 아이티에 전달할 지진 구호물자 7t을 수송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인 중화항공(中華航空)을 전세냈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 여객기가 급유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 기착하도록 허용한 데 있음.
- 대만은 앞서 아이티 지진 구호를 명문으로 내세워 자국 C-130 수송기가 미국령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서해안의 공군기지에 각각 기착, 급유 등을 받은 뒤 지난 22일 아이티에 도착하는 성과를 이뤘음. 대만 공군기가 미국 영토에 착륙한 것은 양측이 1979년 단교 후 31년 만에 처음임.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대만 수송기의 미 영토 착륙설이 나도는 데 대해 “우리는 어떠한 국가라도 대만과 관련 접촉을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 중국은 그러나 마잉주 총통이 타는 여객기의 미국 기착 허용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논평이 없음. 마잉주 총통은 도미니카에 구호물자를 내리고 육로로 아이티에 수송할 계획임. 대만은 아이티에 이



미 500만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보낸 데 이어 이번에 7t의 물품을 추가로 보내 중국과 치열한 구호 경쟁을 벌이는 양상임.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1천800만위안(30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면서 이로써 중국이 지원한 인도적 구호물자 규모는 4천800만위안(8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음. 상무부는 이날 오후 40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과 구조대가 의약품과 위생 및 의료장비, 텐트 등 구호물자 20t 상당을 특별 전세기에 싣고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을 출발했다고 밝혔음.

- 양안의 구조·구호 활동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티와 수교를 둘러싼 외교전의 성격도 짙게 깔려 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분석했음. 중국은 이번에 적극적인 지진 구조·구호와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계기로 미수교국인 아이티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됨. 반면 대만은 23개국에 불과한 수교국의 하나인 아이티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가능하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아이티를 방문할 계획까지 세우는 등 중국의 전면 공세에 대비, 필사적인 수비에 들어갔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임. 중국과 대만은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의 취임을 계기로 '외교 휴전'에 들어가며 양안 관계 발전에 주력해왔음.



[참고 1] <표>한국-주요국 양자관계 규정(연합뉴스, 1/25)

구분	분류	해당국	체결연도
전략 관계	포괄적·전략적 동맹	미국	2009. 6
	전략적 협력 동반자	중국	2008. 8
		러시아	2008. 9
베트남		2009.10	
전략적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멕시코	2005. 9
		알제리	2006. 3
		우즈베키스탄	2006. 3
		인도네시아	2006.12
		루마니아	2008. 9
		유럽연합(EU)	2009. 5
		카자흐스탄	2009. 5
		아랍에미리트(UAE)	2009.12
인도*	2010. 1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베트남	2001. 8
		브라질	2004.11
		아르헨티나	2004.11
		칠레	2004.11
		프랑스	2004.12
동반자 관계	특별동반자	캐나다	1993
	호혜적 동반자	쿠웨이트	2007. 3
	동반자	호주	1999
	미래지향적 동반자	폴란드	2004.12
협력관계	동반자적 협력	뉴질랜드	1999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